

大學 學事管理制度的 발전과제

朴 鍾 烈
(慶北大 教育學科)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의 강화는 대학재정의 획기적 증액을 통한 과감한 교육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고, 행정의 자율성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재정투자가 없이도 대학인의 협동적 노력으로 개혁가능한 부분이 비교적 많은 분야가 學事 분야이다. 이 글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학사관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그 개선방향과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序 言

21세기를 8년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의 사회변화에 비하여 미래의 사회변화는 5배 이상의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산주의의 쇠퇴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와 군사적인 경쟁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지식과 정보 및 기술에 바탕을 둔 사회와 경제부분의 국내외적 개방과 더불어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국제경쟁의 과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의 연구개발이 없이는 모처럼 다져진 경제발전을 무위로 돌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지만 대학기관만큼 이 기능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기관은 없다. 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육·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변화는 大學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미래의 사회가 개방화·다원화·전문화됨에 따라 국제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교육과 연구활동의 선진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 선진화는 대학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증액으로 과감한 교육여건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고 행정의 자율성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재정투자가 없이도 대학인들의 협동적 노력

으로 개혁 가능한 부분이 비교적 많은 분야가 學事 분야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글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학사관리의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현행 학사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추출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과 함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未來社會가 요구하는 學事管理의 方向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사관리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구 및 봉사활동을 질적으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질적 향상은 사회발전의 방향인 국민철학의 정립, 지식창조 사회화, 고도기술 정보화, 국제경쟁력 향상, 자율전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① 國民哲學의 定立

미래의 대학은 국민을 이끌어 갈 철학이 투철한 지도자상을 요구한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영국은 신사도 정신이, 일본은 무사도 정신과 장인 정신이 그 나라의 민족정기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갈고 닦기어 가고 있으나,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의 선비정신과 유교정신이 일제와 해방 그리고 6·25를 통하여 무너지고 새로운 국민철학의 부재 속에 빠져 들었다. 제 3공화국 이후 경제 제일주의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성취주의가 사회의 규범이었고, 88올림픽까지는 국민들의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국제경기의 쇠퇴와 냉전의 와해, 국내경기의 침체 등으로 이기주의와 냉소주의 그리고 허무주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투철한 국민철학을 갖춘 지도적인 인격체를 길러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② 知識創造社會化

미래의 한국 대학은 창조적 지식과 문화적 산실이 되어야 한다. 지식이나 문화의 발전단계는 침투·모방·형성·창조 단계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박종렬 외, 1990, p. 24). 침투 단계는 선진국의 지식·기술·문화가 우리 대학

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단계이고, 모방단계는 우리 대학이 선진국의 지식이나 문화를 그대로 복사하여 활용하거나 번역하여 흉내내는 단계이다. 형성단계는 모방된 지식이나 문화를 우리들 것인 양 경험화 내지 내면화하는 것이고, 창조 단계는 자기화된 지식과 문화를 기초로 해서 더욱 발전시켜 새롭게 생성하는 것이다. 근대 대학의 역사가 일침한 우리 대학의 현실을 보면 일부 대학과 학과를 빼고는 거의가 모방 내지 형성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③ 高度技術情報化

미래의 한국 대학은 고도기술 정보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조직을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외부의 기술정보 변화에도 둔감하여 변화지체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아직도 우리 대학에서는 INTERNET나 BITNET와 같은 국제적인 교육·연구 전산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국내 대학간 교육·연구 전산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도서관의 전산화도 요원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경영의 전산화(MIS)가 아직은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도 기술정보집약적이지 못하고 노동집약적인 상태이다. 특히 대학이 사회를 선도해야 할 책무성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일반 사회보다 늦은 기술정보화는 사회로부터 대학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며, 대학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연장시킬 것이다.

④ 國際競爭力 向上

미래의 한국 대학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는 국제계방화될 것이며 UR과 더불어 교육서비스도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도 상품과 같이 무역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무역은 교육서비스의 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수출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대학교육은 서구 선진국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많은 고급인력을 내보내 일부 인력은 두뇌유출되어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고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귀국하여 국

가와 학문발전에 공헌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고급실업자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 세계 최고의 교수당 학생수는 앞으로 교수인력을 더욱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확충된 고급인력을 통하여 대학이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국의 지식과 기술 및 문화를 축적·창조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식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⑤ 自律專門化

미래의 한국 대학은 전문성에 기초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까닭은 첫째로 대학인은 그 심성적 특징으로서 전문성 지향적이며 자유와 자율 속에서 창의를 개발할 수 있고, 둘째로 대학의 자율성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통해 나타나는 대학의 본질적 속성이며, 셋째로 정치·사회적 민주화와 자율화 흐름 속에 대학발전의 목표를 자율화로 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김중철, 1988, pp. 70~72).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의 자율화에 대한 대학인의 요구수준과 교육관료들의 시각 차이는 이를 지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자율성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학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3. 發展을 저해하는

學事管理制度的 問題點

앞에서 제시한 미래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학사관리의 방향에 비추어 현행 학사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法定主義

대륙법 제정의 법체계 속에서 교원, 교과, 이수단위, 학위논문, 조직체계, 입학자 선발 및 학과 설계 그리고 정원 등이 법으로 획일화되어 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제때에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경직화되어 있다. 미래사회가 개방화·자율화·민주화됨으로써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별 독자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요건만을 법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학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백을 주어야 할 것이

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② 自律範圍에 대한 과다한 見解差

대학인들이 요구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거의 무한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부관료들은 일부 부설대학의 사회적·공공적 무책임성을 예로 들면서 아직은 대학의 자율화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견해는 정부내의 부서, 즉 경제기획원과 교육부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은 국제개방에 따른 민간주도의 자율화 정신에 입각하여 대학도 자율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거나, 교육부는 교육은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더 강하게 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일부 논자들은 교육부가 지원없는 통제(control without support)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 보장과 재정적인 지원을 먼저 하고 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③ 외부 財政支援의 貧弱

과거 엘리트 지향적인 대학교육체제에서는 협의의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학이 운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고등교육의 보편화·대중화 단계에서는 고등교육의 수익자 범위가 기업과 국가 및 사회로 확산된다. 국제적인 자료에 의하면, 영국과 독일은 고등교육에 대한 제정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일본 89.9%(국·공립), 22.5%(사립)를, 미국은 58.3%(주립), 16.8%(사립)를, 프랑스는 93.2%(국·공립), 32.0%(사립)를 각각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윤정일 외 3인, 1988, p. 56).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7년의 경우 정부가 국립에 대해서는 54.3%를, 사립에 대해서는 1.2% 정도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립의 경우 재단이 부설하여 전문대학의 경우 3.6%, 대학의 경우 1.5%밖에 전입하지 못하고 있다(윤정일 외 3인, p. 53). 대학의 재정은 그 절대액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재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정부투자를 늘리고 사회의 기여를 높여 나가는 한편 재단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④ 大學間·學科間 自律競爭促進體制 미정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하여 1982년부터 실

시된 대학평가제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결과에 대한 보상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에 한계성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대학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학과별 평가인정제가 1991년부터 도입되었다. 따라서 대학간·학과간 자율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일천하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대학과 학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국내 대학간에도 질적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 그리고 막연한 사회적 평판에 의해 대학, 계열 및 학과의 우열이 결정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별·학과별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⑤ 自律競争意識과 能力 부족

과거의 대학은 교육부라는 핵우산 속에서 획일화된 정책 아래 안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간 자율경쟁이 필요하지 않았고 필요도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율경쟁의식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도 없었다. 과거의 대학은 대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과다하여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넘쳤으나, 2001년이 지나던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미달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대학교육심의위원회 연구위원회, 1992, pp. 36~37). 그리고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UR 등의 영향으로 개방화와 국제화가 가속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으려고 진학대학의 대상을 선진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대학이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⑥ 大學目標의 具體化 노력 미흡

대학의 목표는 대학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이념과 방향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대학이 이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학 목표의 구체화는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등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지고, 그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련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평가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상적인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며, 대학별로 제시하고 있는 추상적인 목표도 대동소이하여

고유성이 결여되어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91)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 대학은 당당대해에 떠있는 목표가 없이 표류하는 배들과도 같다고 하겠다.

⑦ 教育課程 構成·運營의 부실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제량이 광범위한 대학교육에서는 이들 능력이 바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면서 학문의 발전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계속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많은 대학들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을 통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구성원들이 보직교수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지 않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pp. 69~70). 그리고 개별대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교양과목의 전공과목에 대한 잠식현상이 뚜렷하며, 전공필수과목의 확대에 인하여 학생들의 전공선택 기회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표의 편성관계로 부전공 또는 타과 과목의 이수가 곤란하다. 수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수업계획서 작성 및 활용이 많은 대학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⑧ 學部 學科의 지나친 細分化

학부의 성격에 맞는 학과의 세분화보다는 정원확대를 위한 세분화가 만연되어 유사학과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개설·운영되고 있어서 교육투자효과의 분산, 영세한 교육재정의 중복투자, 한정된 교육투자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대학의 정원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첨단학과 및 신설학과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촉진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대학에서 유사학과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학사회가 보수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서 사회적·문화적·학문적 변화에 따른 학과의 실패와 통합 및 분할에 유연성이 없고 다학문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⑨ 學位履修課程의 質的 저하

'80년대 이후에 질적 통제를 벗어날 정도의 양적 팽창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학위이수규정의 여러 부분이 상충되거나 실질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빚어 왔다. 학부과정에 복수전공과 조기졸업제가 가능하도록 학위이수규정에 법정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천하는 대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학부 학생들의 학습량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선진국 학생들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황정규 외, 1988, p. 66). 대학 졸업 요건으로 요구되는 졸업논문 또는 종합시험제도 역시 많은 대학에서 형식화되고 있다. 석·박사과정의 경우, 전과 입학한 학생들의 선수과목 이수가 충분치 못하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수강생이 합동 수강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합시험이 엄밀하지 못하고, 박사학위 논문심사에서 외부교수의 참여 비율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pp. 66~68). 또한 학·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학습여건의 부실, 즉 도서관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 확보의 부족과 연구·교육 전산망 형성과 활용의 부진, 그리고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장학제도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위과정에 걸맞은 학습활동을 충족되게 할 수 없다.

⑩ 學生選拔權의 制限的 自律

대학은 개별대학의 목적에 비추어 적정수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여건과 학습경험을 마련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대학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적정한 입학정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입학정원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별 여건개선과 연계한 입학수요 예측이 곤란한 형편이다. 그리고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학정원 결정원칙이 사전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입학정원 결정이 대학별 입시공고 시점과 비슷하여 대학별로 질 향상을 위한 자율적 입시관리가 곤란한 형편이다. 한편, 입학생의 선발과정에서 학과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대학차원의 입시전형 방법도 학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미래의 사회가 개방화·자율화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기회도 현재와 같이 고교 졸업이나 제수

후 곧바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후 정시제나 전일제 혹은 야간제 그리고 계절제 등으로 다양화될 전망에 비추어 1년에 단 한 번 입학사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⑪ 教授要員의 專門性 向上 노력 미흡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수요원 임용은 외면상 공개채용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별로 자기대학 출신교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질 높은 교수자들이 무척 방황하는 문제점이 있다. 교수들의 재임용과 승진에 관련된 심사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형식적으로는 연구실적, 교수능력, 제직경력, 학생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직년한과 최소 연구논문 편수 기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p. 85). 따라서 교수들의 업적평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교수들의 자질향상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자체 재원으로 교수들의 국내의 연수를 지원하는 교수연수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망되나 대부분 대학들이 그러한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p. 86). 그리고 안식년제나 교수연구년제 등도 일부 대학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그 수혜규모가 미미한 형편이다.

⑫ 教授研究活動의 量的·質的 미흡

대학의 특성, 즉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에 따라 교수들의 연구활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교수들의 특성에 따라서도 연구중심 교수와 교육중심 교수로 구분하여 그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연구활동은 모든 대학인들에게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대학에 투입되는 연구비는 대학내·외로 볼 때 그 절대액이 부족한 형편이다. 대학내 연구비를 책정할 대학은 그리 많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예산의 1% 미만이 많고 나머지는 2~7% 정도이다. 대학 외부 연구비는 이·공학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인문·사회계는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정책관련 연구비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연구실적의

한 기준으로 대학별 전임교수 1인당 연간 발표논문 건수가 1편 미만인 대학이 전체 대학 중 48%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권기욱·서민원, 1990, p. 59). 연구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는 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아직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연구비의 영세와 국제적인 수준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교수들의 개인연구와 부속연구소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평가하는 研究處나 學術處를 설치·운영하는 대학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p. 93).

③ 學·研·産 協同體制 미흡

대학의 산출인 대학생들은 연구소나 산업체의 인력자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미시적으로 보면 학·연·산 연계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대학은 거대한 공룡과 같아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학재정의 부족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교육과 실습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학에는 고급두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의 부족이나 연구여건의 미흡으로 충분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기술 및 문화창조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미래의 고도기술 정보화사회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가 교육과 실습 그리고 연구활동을 상호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동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국가와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신속한 교환을 하며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의 개발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4. 學事管理制度의 發展方向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개혁방향은 앞에서 논의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사관리의 방향 속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대학별 성숙정도를 감안한 단계별 자율화를 촉진하고, 대학간·학과간 질 향상을 위한 자율경쟁을 촉진하며, 대학

별 개성화를 유도하여 다양화를 촉진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1) 國家的 수준의 發展方向

① 大學評價認定制의 早期 定着

정부는 1991년부터 평가인정제를 학과별 평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1996년부터는 대학별 평가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이학계의 물리학과와 공학계의 전자공학과를 평가인정하기로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관련학회가 주도하여 현재 해당 학과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평가인정제가 실시된 이래 대학별 노력을 보면, 교수요원 확충을 위해 과거에 없던 노력을 하였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위한 재단과 대학 경영자의 지원이 뚜렷하였으며, 학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차적으로는 학회를 중심으로 대학의 물리학과 전자공학 교육의 기본방향과 수준에 대해 학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더할 수 없이 좋은 부산물이었다.

그러나 대학평가인정제의 성과를 향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인정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후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② 大學政策의 段階的·選別的 自律化

대학의 자율화에 대하여 일부 부실대학을 이유로 시기상조를 논하는 집단이 있으므로 일시에 완전자율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화는 자율능력에 따른 차등화 정책이 현실적이다. 대학의 자율능력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대학발전 주요지표에 의한 평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행한 대학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종합평가 인정결과(1996년 이후)를 활용한다.

2) 大學 수준의 發展方向

① 個性있는 大學으로의 발전

개성있는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는 자율화이다.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 종합대학화하려는 노력이 결국은 대학의 비대화와 하향 평준화 현상을 빚게 되었는데, 이는 현행법 테두

리 내에서 발전을 모색하려고 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의 개성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별로 특성 있는 대학발전을 위한 민주적이고도 종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教育課程 구성·운영의 國際化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교육과정 경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비교연구를 통한 계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별로 수행하는 것도 좋으나, 비슷한 특성의 대학간 협동노력으로 할 수 있으며 대학간 협의기구에서도 할 수 있다.

③ 教育·研究活動의 質의 秀越性 추구

대학의 중요기능인 교육·연구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대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충분히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의 자율권이 주어지고, 대학별 교육과 연구여건 확보를 위한 자구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④ 學·研·産 協同體制 구축

미래의 고도 기술정보화 사회에서 대학이 지식과 기술 및 문화 창조를 위한 메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체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원과 자본의 제약이 있는 특수상황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5. 學事管理制度의 發展課題

미래사회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개혁방향은 앞에서 논의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사관리의 방향 속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를 추출하여야 할 것이다.

1) 國家的 수준의 政策課題

① 大學評價認定制의 早期 定着

ㄱ. 評價認定機關의 專門化

현재 평가인정기관은 대학교육심의회의로 되어 있고, 과거 대학평가를 담당하던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는 학회와 연계하여 기준개발과 현지방문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대학교육심의회에 보고하는 평가기관의 역할을 하며, 대학의 각 학과는 자체평가를 하는 다원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는 특이한 한국적인 조직체제이다. 따라서 단계적으로는 대학평가를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체제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평가 전문기관을 확보하고 혼련하는 계획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ㄴ. 評價認定結果에 따른 選別的 支援

현재의 평가인정결과는 사회적인 공개와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이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재정적 지원에 대한 가시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 연구』(박종렬 외 14인, 1990)에서는 우수하다고 판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비와 장학금 지원에 우선순위를 높이며, 교육시설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설·설비기준에 규정된 최소한의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는 자체부담 재원의 조달에 상응하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배분 방안으로 구분하여 정책화되어야 할 것이다.

② 大學政策의 段階的·選別的 自律化

ㄱ. 政府主導 選別 自律化(1995년까지)

1995년까지는 정부가 주도하여 대학발전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중요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를 참조하여 우수, 양호, 보통으로 등급화한다. 우수관정을 받은 대학은 모든 지표가 바람직한 수준이고, 양호관정을 받은 대학은 부분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지만 개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며, 보통관정을 받은 대학은 대부분 지표에서 미흡한 상태를 뜻한다. 우수관정을 받은 대학은 입학정책, 교육과정 운영, 학위과정 개설과 등록, 학과개편, 행정조직 개편, 학칙개정 등에 있어서 대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양호관정을 받은 대학은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되 대학의 질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충분히 보이도록

유도하며, 보통관정을 받은 대학은 정부주도적 인 질 향상을 도모한다.

나. 評價認定機構 主導 自律化(1996년 이후)

1996년 이후에는 대학목표, 교육과정, 교수, 학생, 시설·설비, 행·재정 등 6개 분야에 걸친 대학종합평가 인정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완전 자율화를 실시하고, 자율능력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자율화 정책을 적용한다. 평가인정 결과 우수관정을 받은 대학은 대학원중심대학, 대학원병설대학, 학부중심대학의 특성을 살려 개성있는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재정 지원을 유도한다. 양호관정을 받은 대학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차적 보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의 자구적인 재정계획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한다. 미흡관정을 받은 대학은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3년 후 재평가인정을 받도록 한다.

2) 大學 수준의 政策課題

① 個性있는 大學으로의 발전

가. 大學目標의 明瞭化

대학목표의 명료화는 단순히 몇몇 대학인의 손으로 만들어지면 그 효과가 체감된다. 이 작업은 심도있는 연구와 다양한 대학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합의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특성있는 대학을 위한 가시적이고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한 목표의 구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明瞭화된 목표에 따른 大學 프로그램 개발

명료화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실천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평가작업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정시제, 야간제, 계절제, 학·연·산 협동, 학·석·박·박사후 학위과정, 사회교육, 진로지도 등 여러 가지 특성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② 教育課程 구성·운영의 國際化

가. 學會別 定期 教育과정 개발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40여 개의 학

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학회와 협조하여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연구비가 영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도의 한정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비로 되도록 많은 학과의 국제비교 연구를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연구결과의 활용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나. 大學의 特性에 맞는 教養教育 개발

현재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양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교양교육은 국민철학의 정립과 지도자의 품성도야 및 현대인의 생활이해에 적절되는 보다 현실성 있고 문제중심적이며 생활중심적인 방향으로 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수준은 고등학교보다는 한 단계 높으며 대학인의 지성에 맞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 大學別 教育課程 研究委員會 연구개발 활동의 實質化

교육과정 연구위원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보직교수들의 참여를 배제한 전문교수들로 구성하고, 연구비를 과제별로 현실화하여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예산에 반영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관련학과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졸업생 및 산업체 관계 인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③ 教育·研究活動의 質의 秀越性 추구

가. 常設화된 學生選拔機構 설치·운영

대학이 자율화되면 정시제나 야간제 및 계절제 그리고 편입제 등이 적용될 것이고, 학생선발은 현재와 같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정례적·한시적인 작업으로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또한 대학수학능력고사가 1년에 두 번 이상 치러지면 입학에 위해서 1년을 기다리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따라서 입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별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선발작업을 상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발기준도 입학정원에 의한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개개 학생이 그 대학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개별학과의 학생수용 능력 및 장학금 지급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ㄴ. 助教制度의 다양화 및 生活給 정도의 給與
조교제도는 교육조교와 연구조교 그리고 행정
조교로 세분화하여 대학의 기능을 심화하고 고
밀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교육·연
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여수준을 높여 생활급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ㄷ. 국내 優秀 大學生 獎學制度 도입

국비 해외유학생 선발과 같이 국내 대학원 장
학생 선발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우수학생
을 정부차원에서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되, 등록
금과 생활비까지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
다. 이 제도는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
는 데 우리 대학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를 살
리는 것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후진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겸해야
할 것이다.

ㄹ. 教育·研究 電算網 개발

국제적인 교육·연구 전산망의 도입도 중요하
지만, 국내 대학간의 전산망이 형성될 수 있도
록 대학별 도서관의 전산화와 도서관의 절대수 확
보는 필수적이고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작업은 대학별로 분야별 전문화를 도모하여 국
가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국내발간
연구물이나 저서 그리고 정기 간행물뿐만 아니
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ㅁ. 教授業績의 客觀的 評價

교수의 업적평가를 [정례화하고 그 기준을 강
화하여 객관적인 교수의 교육·연구 활동 평가
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대학의 특성, 즉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에 따라 연구개발되어 적용하여야 하고 가중치
가 달리 주어져야 한다.

④ 學·研·産 協同體制 구축

ㄱ. 教育 및 研究人力の 水平的 교류

대학·연구소·산업체 간의 교육과 연구인력
교류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과 실습 기자재의
활용과 기술을 개발하고, 부족한 교수인력의 확
보를 이룰 수 있도록 겸임교수나 방문연구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대학·연구소·산업체에 다같이
안식년제나 연구년제를 두어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산업체 간의 파견근무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ㄴ. 大學內 研究所의 통·폐합

대학 내의 연구소를 업적과 연구비 확보상태
및 지역내 대학간 특성화에 따라 자율 정비하도
록 한다. 그리고 권역별로 대학 구내에 자체 기
획능력이 있는 거점연구소를 설립하여 해당 지
역의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
록 하고, 국제협력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김정구, 1992, p. 40).

6. 結 言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사관리는 기본적으로 교
육과 연구 및 봉사활동을 질적으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적 향상은 사회발전의 방향인 국민철
학의 정립, 지식창조 사회화, 고도기술 정보화,
국제경쟁력 향상, 자율전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현
재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학의 학사
관리가 과도하게 범정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율전문화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대학간·학과
간의 자율경쟁 촉진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대학내·대학간의 정보교류망이 형성되지 않
아 고도기술 정보화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대학
의 연구자원의 질적·양적 부족으로 지식창조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평
가인정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대학의 정책을 단
계적·선별적으로 자율화시키며, 대학을 특성화
하여 개성있는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
육과정 구성과 운영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
시키고, 교육과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고, 더 나아가 학·산·연 협동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대학인들의 위기의
식과 발전에 대한 동기유발, 뼈를 깎는 합의된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권기욱·서민원, 『대학교육 발전지표』, 한국대학교육협회의, 1990.

김정구, “기초과학 활성화와 대학의 역할”, 『대학교육』(특권 57호), 한국대학교육협회의, 1992.5.

김종철, “대학의 자치와 교권”(세미나 자료), 한국대학교육협회의, 1988.

교육부, 『교육백서』, 1992.

대학교육협의회 연구위원회,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방향 및 지표설정 연구』(미발간 증간보고), 1992.

박종렬 외 14인,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 연구』(I), (II), (III), 한국대학교육협회의, 1990.

서울대학교 사회정의실천 모임, 『한국대학의 실상과 반성』(1992년 특별기획 공개토론회 자료), 1992.

윤정일 외 3인, 『대학교육제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대학교육협회의, 1988.

한국고등교육연구회,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1991년도 한국고등교육연구회 3차 세미나 자료), 1991.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교육』, 1985.11, 1987.5, 1987.9, 1990.5, 1991.9, 1992.5.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기관평가 종합보고서』, 1988, 1989, 1990, 1991.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진국대학 주요 교육발전 지표』, 1987.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한국대학교육협회의 10년사』, 1992.

황정규 외 3인, 『대학의 교수-학습 체계분석과 학습량 적정화 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회의, 1988.